

시민평화포럼 2016년 1차 정책포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

일시 2016년 3월 30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로그램

[1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

- 사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1: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미중의 입장 /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발제2: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점점 찾기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지정토론: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질의 응답

[2부] 라운드 테이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사회: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
- 발제1: 평화체제 수립과 기독교인 운동-교회협을 중심으로 / 노혜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부장
- 발제2: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운동-WCD를 중심으로 /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지정토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회원(솔빛한의원 원장)
- 참석자 종합토론

목차

1부

- 발제1: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미중의 입장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 3p.
- 발제2: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점점 찾기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9p.

2부

- 발제1: 평화체제 수립과 기독교인 운동-교회협을 중심으로 (노혜민 목사) / 14p.
- 발제2: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운동-WCD를 중심으로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 16p.

1부 발제1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관한 남북미중의 입장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1. 한반도 평화 논의의 역사

1) 국제적 논의

-평화문제는 6.25전쟁이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마무리된 직후부터 한반도의 최대 과제.

※정전협정 제4조 60항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전정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정치회담 개최. 이 회담에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16개국 중 15개국, 중국과 북한이 참가했으며 남한에서는 변영태 외무장관, 북한에서는 남일 외무상이 각각 참석. 회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

-1975년 9월 22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제3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4자회담을 열자고 제안. 키신저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고 주변국가들이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을 제의.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4자회담(남·북·미·중)을 제안. 1999년까지 회담이 이어졌지만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단.

-6자회담이라는 다자논의 구조가 마련되면서 나온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 개최 내용도 포함.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 남북간 논의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7·7선언 발표와 이어진 남북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본 골격 마련. 기본합의서 서문은 “남과 북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고 명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이행방안도 마련.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결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 시작.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10·4선언에 합의하고 남북간 군사논의와 더불어 정전체제를 종전체제와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까지 합의. 10·4선언의 제4조는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여는데 협력기로 했음.

2. 한쌍으로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큰 틀 속에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한쌍으로 동반 논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정부 성명

“이번 수소탄시험은 우리 핵무력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이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

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이 세상에 적대시라는 말이 생겨난 이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처럼 그토록 뿌리깊고 포악무도하며 집요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중략)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한 조치로 된다.(중략)

우리의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위급회담에서 화해와 불가침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

-1994년 북미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함께 명시. 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발전소로 대체 공급하고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및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 등 명시. 미국의 대북 핵무기 불사용 공식 보장과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강조.

-9.19공동성명은 비핵화, 관계정상화, 국제지원, 평화체제 등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비핵화화 관련해 북한의 핵계획 포기 및 NPT와 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공약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 없음을 확인. 북미 북일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이 별도의 포럼 개최키로 함.

3. 평화협정-비핵화 논의에 대한 남북미중의 입장

1) 남한

-평화협정과 비핵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현재는 대화 보다는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 견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3월10일 워싱턴 방문시 기자문답)

“한·미 양국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고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3월14일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붕괴할 것이라는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

※박근혜 대통령(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

2) 북한

-북한이 최근 공식적으로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 다만 북한 매체도 최근 미국에 대해 사태 수습을 강조하며 평화협정 논의에 방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월 11일 '우리가 핵보유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에서 “미국은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는 외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 국면 전환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

-조선중앙통신은 3월 22일 논평에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화협정 논의 요구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이것을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그 누구의 핵폐기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현실도피의 사고방식“이라며 “미국이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조선반도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월 15일 “조선(북한)은 3년 전 조미(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언명한 바 있다“고 강조.

※북한은 2013년 6월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 당시 북한은 미국에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

3) 미국

-미국 정부는 북한이 참가하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

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3월8일 논평)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반한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말해 왔다“면서 “동시에 어떤 대화든 비핵화가 핵심이며,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문제와 병행해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해 한국 정부와는 다소간의 입장 차이.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3월4일 정례브리핑)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을 때 언급한 대로 우리는 (비핵화-평화협정)병행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3월 8일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Press Release)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불만 접수 가능성.

4) 중국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도 동시에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평화협정 문제의 병행 논의 촉구.

-왕이 외교부장(2월17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

“이런 방식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한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화·담판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대화 복귀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주력

-왕이 외교부장(3월8일, 전인대 기간 기자회견)

“한반도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만 된다면 우리는 각국이 제기한 3자, 4자, 나아가 5자 접촉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책(방책)으로 병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해야 한다. 단순히 제재와 압력을 맹신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부동한 목표이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와 관심사항“

1부 발제2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점점 찾기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대북 제재와 봉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 현재(3월 28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 연일 ‘핵 억제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의에선 중국의 제안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선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시한다.

이러한 와중에 일각에선 미중간의 타협에 의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회의적이다. 우선 미중이 타협에 도달하더라도 핵심적인 당사국인 남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비핵화는 북한의 결단, 평화협정은 한국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가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상호 적개심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평화협정을 논의할 처지도 못 된다. 탐색적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 없는 대결’은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우선 남북대화의 의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남북대화를 간헐적으로 이어주었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작년 남북 합의 불발로 그 맥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마저 중단시킨 상황이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는데 그 현실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위축된 셈이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한반도 정세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워싱턴에 전해지지 않으면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 구도와 지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실질적인 논의와 진전을 위해서는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정치 리더십 창출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일단 비관적이다. 끊임없이 북한을 호출하고 이용하면서 정권 안보와 선거 승리를 도모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권 역시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은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는 대북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하여 절망의 근거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한국 정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풀자는 제안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제기했어야 했다. 정부가 마다한다면 야권이 강하게 제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일축했고, 야당은 가타부타 거의 말이 없다. 이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관련국들 협상 테이블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외교 담론에서도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리하자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점점 찾기는 두 의제 사이의 교집합을 만들어 키우는 것 못지않게,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겠다는 행위자가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야당에게도 각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본 정책 대안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2.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에 포함시키자

본 발표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평화체제라는 커다란 용광로에 녹여내자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혹은 평화체제)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9.19 공동성명에서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 이라고 했는데, 이 때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것인지가 모호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논란도 거셌다.

가령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가 밝히면서도

그 시점을 “비핵화 완료 이후”로 못 박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평화협정의 사전단계이면서 비핵화에 추동력 부여하고자 ‘중전 선언’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중전 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대규모의 경제 지원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혼선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와의 관계도 모호했고, 평화협정이든 평화체제가든 이를 비핵화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도 불확실했던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여기서 1차적인 관건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관계이다. 협정을 체제와 동일시하는지, 아니면 협정을 체제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정 자체를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정전체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처럼, 평화협정 역시 평화체제의 중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면, 핵심적인 문제,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역시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라는 개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상정할 수 있고, 핵동결을 비핵화의 중단 단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사이의 교집합 찾기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는 평화체제라는 큰 집합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부분집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3. 평화체제로 가는 과도기로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추진하자

평화체제는 정전체제의 대체물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상호간의 주권 존중 및 불가침을 약속할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전체제의 핵심은 강력한 군사력 및 준비 태세에 기반을 둔 전쟁 억제 및 억제 실패시 승전을 추구하는 일방적 안보 추구이다. 그렇다면 평화체제는 일방적 안보 추구에서 협력 및 공동 안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호간의 적대 관계 청산뿐만 아니라 군사적 억제력의 폐기나 하향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평화체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화협정과 핵동결을 평화체제로 가는 중대한 과도기로 상

정할 수 있다. 물론 핵동결은 비핵화 공약을 전제로 할 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다. 핵동결 조치 문제는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은 4자 평화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동결은 이른바 ‘3 No’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 증강’을 차단하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No more), ‘질적 향상’을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 및 위성 발사를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No better), 그리고 핵무기 및 기술과 물질 해외 이전 중단 약속 유지(No export)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동결 감시단이 영변으로 복귀해 동결 상태 확인을 마친 직후로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 조항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평화협정 논의가 비핵화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한미 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중요한 일부라는 주장이 법적·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평화협정에 명시되어야 할 비핵화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식,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조소한 NPT 복귀 의사 재천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남한의 비핵화 공약 준수, 미국의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 군사훈련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반입 금지, 북핵 폐기 완료시 미국의 핵우산 철수 등의 포함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본 협정(basic treaty)+추가협정(additional protocol)’ 방식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온 여러 조약 체결 방식과 흡사한 것이다. 상호 주권 존중,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불가침, 한반도 핵문제 해결 방안,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 원칙적이고 합의 가능한 항목들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북방한계선(NLL),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구성과 운용과 같은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서’에 담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핵심 취지는 핵동결은 시급한 과제인 반면에, 평화협정 협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4. 북핵이 존재론적 위협이라면

정말로 북핵이 한국에게 ‘존재론적인 위협’이라면 우리는 이에 걸맞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단, 그 비상한 각오가 존재론적인 위협을 키우거나 그 위협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안적인 각오는 지금까지 제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에 있다. 그건 바로 북한에게 핵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를 제시하면서 대담판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 한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신뢰구축 등을 망라한다. 뻔한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이 이 길을 제대로 가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길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본 적은 있었다. 먼저 1999-2000년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 공조로 만들어진 페리 프로세스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미국의 정권 교체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2007-2008년에도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미일이 3단계에서 다루기로 했던 북핵 검증을 2단계로 가져오면서 유실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흡수통일론에 사로잡힌 탓이 컸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북핵은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괴물처럼 커져버렸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핵무장을 전제로 국가전략을 짜고 있어 비핵화를 유도하기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포기해도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는 평화와 통일,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통의 크기를 키워 북한의 굴복을 유도하려는 방식이었다. 이건 실패로 끝났다. 이제는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핵 포기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건 결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열거한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가 핵심이다. 또한 이건 북한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 모두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먼저 북핵 실험이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 ‘강 대 강’의 대결보다는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핵 실험을 이유로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 나라의 ‘군사’ 공조가 아니라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외교’ 공조이다.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연대를 통해 북한과의 대담판 틀을 짜야 한다. 그리고 8년째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는 6자회담의 조건 없는 재개와 9.19 공동성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미중 4자간 평화포럼의 시동도 걸어야 한다.

2부 발제1

평화체제 수립과 기독교인 운동

- 교회협을 중심으로

노혜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 부장

1. 분단지속의 이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 하지 않았다. 이런 협의들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평화체제의 시작 - 평화조약체결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안 지키고 전쟁하면 휴지조각 되는 것 아닌가!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세워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3. 특별히 평화조약이라 표현하는 이유

조약과 협정은 법적 절차가 다르다. 협정은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적 구속력과 지속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4.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기독교인 운동 - 평화조약체결캠페인

1) 평화조약체결 서명운동 - 평화조약체결 청원

2011년 9월 평화함께 2013위원회 조직.(공동위원장 : 이해학 목사, 김기택 목사)

2012년 11월 온라인 서명시작

2012년 12월 평화콘서트-평화의 상상력 “큰 나무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네” 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순회하며 콘서트를 통해 평화조약체결 서명을 받다.
 2013년 3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연대회의를 결성
 2013년 5월 미국감리교회가 주최하여 아틀란타 평화회의를 개최하다.
 2013년 7월 1인 릴레이 평화캠페인을 26일간 진행.
 2013년 7월 정전협정 60년, 한국기독인 소이산 평화기도회를 진행하다.
 2013년 11월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부산총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교회에 평화조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외교회로 평화캠페인을 확산하다.
 2014년 6월 스위스 보세이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한 국제협의회를 개최하다.
 2014년 7월 미국감리교회가 주최하여 워싱턴 DC에서 평화행진을 하다.
 2015년 7월 ‘평화조약체결 행정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27일 평화조약체결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

2) 평화조약체결캠페인 - ‘Korea Peace Day’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점으로 평화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국내외 교계에 알리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NCCK, YMCA, EYCK, BPS 등 에큐메니칼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평화조약 체결 촉구 서명운동과 캠페인, 그리고 ‘DMZ 평화순례와 철원 소이산 평화기도회’를 개최

3)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국제캠페인

- 2016년 5월 국제워크샵
- 2016년 7월 미국캠페인

5. 맺음말

평화체제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상황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욱 강한 군사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평화조약이 체결된다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평화체제수립의 단초가 제공되길 바라며, 남북 간 민간교류를 통해 그동안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남북 간 모든 교류를 불허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인들은 ‘평화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2부 발제2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운동 - WomenCrossDMZ를 중심으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 WomenCrossDMZ

약물인 듯한 액체 속에 구더기같이 생긴 연분홍 벌레들이 잠겨 있었다.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판 세상,
극한 상황의 전쟁터가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것이 다 벌레의 짓이었을까
- 박완서, [그 남자네 집]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할 일이란 단 하나,
즉 영원히 적군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다.
- 기 드 모파상, [비갯덩어리]

1. ‘평화,’ ‘평화권’

1997년 UN이 정한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에서 제시되는 평화문화에 대한 vision의 내용은 1) 모든 형태의 폭력 거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폭력적 갈등의 뿌리 근절과 방지에 헌신 2) 현재와 미래 세대가 추구하는 개발과 환경적 요구를 공평하게 하는 과정에 통전적으로 참여 3)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증진 4) 모든 사람의 표현 의사 정보에의 자유 인정 5) 국가와 인종 종교 문화 그룹 간 그리고 개인 간의 자유 민주주의 관용 연대 협동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대화 이해의 원칙에 헌신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평화’의 개념 역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는 등의 착취적 관계의 극복 혹은 정의와 안녕을 위한 조건의 실현’을 의미한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권 선언, 2010년 산티아고 평화권 선언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평화란 과거 좁은 의미의 평화가 아닌 넓은 의미의 평화, 즉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 Johan Galtung)를 의미한다.

산티아고 선언 3조 4항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지속적 발전에 대한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다음을 향유할 것을 포함한다. 1) 먹을 것, 마실 것, 위생, 보건, 입을 것, 주거,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권리 2) 노동, 고용 및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에 대한 공정한 환경을 누릴 권리, 동일 직업 또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평등한 조건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등.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20기 유엔인권이사회(2012)에 제출한 ‘평화권 선언 초안’의 2조 7항에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을 발생시키는 불평등, 배제(exclusion), 및 빈곤을 없애기 위해 제도가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권’이란 ‘평화적 생존권’으로서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유추할 수 있다.¹⁾

2. 한반도에서의 ‘평화,’ ‘평화권,’ 그리고 여성의 평화와 안보

현재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분단이다. 분단은 식민지배로부터 유래했으며, 이후 군사주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기저를 이루는 가부장제는 한반도 여성에게 또 다른 큰 위협이다.

미국과 소련의 2차세계대전 전후처리의 부산물로 등장한 한반도 분할과 강대국 후원 하에 세워진 남북한의 이질적인 두 개의 정부, 그리고 국제전이 되어버린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의 체결. 아직도 한반도를 배회하는 전쟁의 유령은 한반도 정전 체제 60여년의 현재 모습이다.

한반도 분단체제²⁾ 70년은 남북한 정권이 분쟁예방과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60년째 지속되는 정전체제는 한반도를 잠재적 무력분쟁지역으로 고착화시켰으며, 전쟁위험의 일상화와 남한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분단과 전쟁, 정전협정 체결 등 모든 과정에 단 한 명의 여성도 주요정책결정자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 이경주(2014), [평화권의 이해], pp. 30.

2) 백낙청은 남북한이 모두 정전체제를 악용하여 상호 존립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p.15.

전쟁과 국가안보, 권력을 주요 테마로 하는 전통적인 서구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정치학의 범주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³⁾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the classic security dilemma), 즉 불완전한 현실세계에서 국가는 타국의 의도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무장해야 하며, 이러한 군사와 외교정책이 감정적이거나 약한 존재인 여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결정영역이다. 이는 젠더위계질서(gender hierarchies)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배적인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평가절하(안 티커너 : 2001, 22, 23)시키는 논리이며, 냉전시대의 국제관계이론은 케난(G. Kennan), 키신저(H. Kissinger) 등이 국제정치에서 대중의 걱정과 위협과 외교정책에 대해 정보를 지니지 못한 일반인들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외교분야의 관리는 사심없고 객관적인 엘리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앞 책: 27).

현실주의자들에게 안보는 국가의 군사적 안보(the military security of the state)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남성은 국가안보에서 군인과 외교관으로서 국가를 방어하며 국익을 신장시켜 온 반면, 그 국가의 남성들에게 보호받는 존재인 여성의 역할은 매우 모호하게 처리된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 논리는 한반도 분단 이후 정전체제 형성기까지 그대로 작동했으며, 여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남성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분단과 전쟁, 분단의 고착화, 통일론의 왜곡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여성은 적지 않은 평화통일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저평가되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이산가족, 전쟁미망인, 기지촌여성, 군사주의사회문화의 폭력성에 노출된 여성, 탈북여성 등 피해자로서 피해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강대국에 의한 38선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의 재고착화, 북한의 핵실험과 IAEA 탈퇴, 한미합동 대규모 연례 군사훈련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에서 생존하고 있는 한반도 국민에게는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좀 더 넓은 평화적 생존 개념에 기초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 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표현자유 침해 거부도 포함될 것이다. 평화권은 여성안보 개념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프랑스혁명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혁명에 동참했던 올랑뜨 드 구주(Olympe de Gouge/1748-1793)는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페로아뉴 드 메리쿠르(Theroigne de Mericourt/1762-1817)의 경우 하층여성을 조직하여 여성을 무장화, 혁명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1790년에 국민의회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요구하자 자코뱅파는 “여성이 국가방위에 봉사하는 것은 금지할 이유가 없지만 국가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자코뱅파에 의해 앙뜨와네트 살해 음모 혐의로 투옥되고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최후를 맞는다. 1791년에 제정된 프랑스 헌법에도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과 이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시민을 구분하여 여성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서 노동자와 함께 공적영역에서 배제되었다.

3. 여성안보의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과 정전체제의 성립

1) 여성안보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의 안보란 남성성을 전제로 한 ‘배타적인 시민-전사(citizen-warrior), 전사-시민권(warrior-citizenship)’을 중심으로, “국가는 남자(전사)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적인 일을 안심하고 맡기는 것”(안 티커너 : 2001, 63)으로 정의된다. 즉 안보에 대한 군사화된 관점은 남성적인 특성을 중요시하며, 남성은 안보제공자라는 역할 때문에 1등시민으로 격상되는데, 이것은 철저한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전쟁 종결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경우, 전 식민지 국가와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감정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존재, 즉 여성과 관련되는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지구상에서 백인 앵글로 색슨 남성이 나머지 민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는 1970년대 초반 냉전의 약화와 유가상승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이후 평화달성, 경제정의, 생태학적 지탱에서 더 이상 유용한 틀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즉 ‘안보’ 개념의 재정의(redefinition, reformulation, re-vision)⁴⁾,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국가주의(nationalism), 군사주의(militarism)에서 표방하였던 ‘상호파괴가 아닌 공유된 생존(joint survival rather than mutual destruction)’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⁵⁾ ‘인간안보(human security)’⁶⁾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여성의 시각에서도 그동안 여성을 침묵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주변화(marginalized)시켰던 기존의 안보 개념 대신 ‘여성안보’ 개념이 등장하였다.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최종보고서에서는 ‘평화’를 “국내와 국제수준

4) “여성의 눈으로 세계와 사물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명명”하는 것. “여성부재의 영역에 여성의 공간을 만들고,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새 질서 형성에 힘을 보태는 것.” 이김현숙, “한반도 분단 극복과 UN 1325 호 국가행동계획” 201305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

5) O. Palme, Common Security : A Blueprint for Survival, p. xiii. 79.

6) 1999년 UNDP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안보의 시민화(civilization of security)를 표방하였다.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며, 인권존중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한다. ‘공포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표방하며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안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1) 경제적인 안보 : 실업·직업 불안정·노동 조건의 열악·수입 불평등·인플레이션·불충분한 사회 복지 안전망 무주택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2) 식량 안보 : 식량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 보장. 3) 건강 안보 : HIV·각종 병충해와 질병·오염된 물·토양·공기로부터 얻게 되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4) 환경 안보 : 지역적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에코 시스템의 황폐화 식수 부족·홍수 및 기타 자연 재해 삼림 황폐화·물과 공기, 토양의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5) 개인적인 안보 : 국가와 범죄 집단, 또는 가족·작업장·산업 노동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6) 공동체 안보 : 인종적 갈등과 폭력적인 충돌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7) 정치적 안보 : 인권침해 및 국가 억압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의 전쟁, 폭력 및 교전상태가 없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정의를 향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안보는 제로섬 게임이며 따라서 타인의 불안정성에 기초한다는 현실주의의 가설을 부정하였으며, 구조적 폭력, 즉 군사적이건, 경제적이건, 또는 성적이건 관계없이 ‘폭력이 없는 상태’(absence of violence)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 티커너: 2001, 81). 이로써 여성의 안보에 대한 정의는 다층적(multilevel),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형태를 띠었으며, 여성이 더 이상 안보 영역에서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갈등해결자, 평화주의자로서 적극적인 역할⁷⁾을 담당하도록 위치지어졌다. 이후 계속된 여성안보 개념 재정의 노력⁸⁾을 종합해 보면 여성안보의 주요 범주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전제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군사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⁹⁾ :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여성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 노예화 및 성폭력 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냉전 종식 후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갈등 지역 부상자의 90%가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 이 중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며, 전 세계 난민 중 70-80%가 여성과 아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경제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 즉 식량 의복 주거 깨끗한 물과 공기의 확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그 과실이 매우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womenization of poverty) 심각. 인종 및 성적 차별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노동권 침해 사례도 경제적 폭력의 한 형태이며, 선진국의 자원 독식과 난개발로 인한 저개발 국가의 환경 파괴화와 자원 고갈은 저개발 국가 여성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3) 성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가부장제적이고 여성

7) UN 안보리 결의안 1325(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00. 10. 31)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여성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 2. 27에 국회에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통과되었으며, 제대로 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될 경우 한반도 분단의 현실 속에서 평화·통일·외교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안보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2000년)에서 제기된 ‘진정한 안보(genuine security)’에서는 내용을 1)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 옷, 집,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 3)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되어야 한다. 4) 인간과 자연환경은 피할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미군사주의반대여성네트워크(SAFE/2001, 2004)에서는 ‘여성안보’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기하였다. 1)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와 군사화 지역 팽창 반대 2) 무기 생산과 판매의 축소. 민간인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군사에 근거를 둔 산업을 전환하도록 할 것. 3)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비군사적 파위를 발전시킬 것. 4)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것. 5) 재생 자원 에너지를 개발할 것. 6) 전쟁과 병사들에 대한 청송 중단. 평화를 위한 헤이그 호소와 유네스코의 평화 문화(culture of peace) 정착과 같은 시도를 지원할 것. 7) 인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간격을 없애고, 남성다움과 군사주의를 연결하지 말 것. 8) 지역 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민주적 과정과 구조를 발전시킬 것. 9) 인간과 환경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적 지출의 방향을 수정할 것. 10) 팽창된 군사예산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자원을 뺏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것 등이다.

비하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가정과 사회,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의 성에 대한 차별화 및 억압,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제이주의 활성화와 함께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인신매매, 성 상품화를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2000년 현재 약 5억 명의 여성 이주인이 있고, 그 중 필리핀, 스리랑카, 기타 다른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이 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다.

강대국에 의한 분할점령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진 정전체제라는 특수성을 가진 한반도에서 여성안보의 내용은, ‘군사적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항목에서 대내적인 폭력 외에도 주한미군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폭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후 소련과 함께 냉전 주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실주의자들이 언급한대로 국제질서의 무정부성을 전제로 소련과 함께 냉전을 주도하였는데, 전후처리의 전리품으로서 획득한 남한에 대소반공보루 구축 전략을 세워 미군을 주둔시켰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 여전히 자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질서는 군사패권주의¹⁰⁾와 연관되어 선제공격 정당화 논리와 대외군사개입의 정당화,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전쟁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전쟁상태인 한반도에 언제라도 적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은 여성대상범죄, 환경오염, 방위비 분담 등의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안전과 복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한국전 여성안보의 범주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위의 여성안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과정은 철저하게 여성안보에 치명적이고 위협적이었다.

2) 80년대 이후 여성의 평화통일운동

한반도 여성의 삶에서 평화란 생명이 생명답게 유지 보전되는 조건, 환경을 의미하며, 평화는 생명의 조건이기에 생명을 질식시킨 평화는 이미 평화가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살림) 보존하는 것. 따라서 통일 과정은 반드시 ‘평화’여야 하며, 통일의 완성 또한 평화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여성들은 외세의 억압과 분단구조 아래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겪어 왔다. 분단구조가 한반도 여성의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분단은 비인간화, 비생명화, 비평화로서 한반도 여성의 삶에 가장 절대적인 위협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곧 통일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1980년대부터 여성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분단을 가부장적 지배문화의 결과로 규정, 분단

10) 미국의 총 군사력 140만, 세계 군사기지 총 130개 국가에 1천 개 보유, 군인 30만 이상 파견 중.

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여성이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여성들은 평화 생명 통일을 펼쳐 나갔으며, 이는 군비축소운동, 반핵평화여성선언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들은 핵발전소 설치 반대운동, 반전반핵운동, 반기생관광운동, ‘위안부’ 항의시위, 군비축소운동, 생태계 보전운동 등 구체적인 운동을 펼쳤다.

90년대에는 여성들이 군사비 감축운동, 방위비 삭감운동 등을 거리 설명회, 기자회견, 전단배포,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무기전시회 반대 가두시위와 전단배포 등을 통해 전개하였다.

4. WomenCrossDMZ(WCD)

한반도 여성들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종단과 건기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단 46년만에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서 넘은 두 번의 사건, 즉 1991년 11월 25일-30일에 이루어진 북측 여성대표단의 서울 방문과 1992년 9월 1일-6일에 이루어진 남측 여성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그 첫 시도를 보여 준 것이었다.

그리고 2000년 615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남북여성의 상봉이 수차례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중단되었는데, 최근 2015년에는 Korean-American 여성들과 해외 여성들이 주축이 된 WCD 국제대표단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 종단 행사가 이루어졌다. 비록 남북여성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비무장지대를 종단하지 못했던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다시 여성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걸어 넘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서, 국내외에서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과 전략이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다채롭게 전개되는 해였으며, WCD 행사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인 5월 24일을 전후하여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공감대를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이 행사는 한 Korean-American 여성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획자인 Christine Ahn은 2009년 여름, 남북한 당국의 불통과 무책임으로 인한 임진강 홍수 피해 참사에 대해 분노와 연민으로 꿈을 꾸던 중 여성들이 수원지에서 원을 만들고 향아리에 무언가를 담는 것을 보고 바로 여성이 한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 꿈을 주위의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고교 동창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인 Gloria Steinem,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Mairead Maquire, Leymah Gbowee,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성 평화운동가 등 자발적으로 모인 30 여 명으로 2015년 초에 WCD국제대표단을 꾸렸다.

이들 국제대표단은 2015년 3월 1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보행진하겠다는 ‘Women Cross DMZ’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한 정부와 유엔에 승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남북정부의 승인과 미국 정부, 유엔사 등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에 대한 상이 일치하지 않는 남남갈등은 이들을 중북, 친북으로 색깔을 입혀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깎아 내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5년 4월 초에는 국제대표단의 남측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여성회 등 5개의 실행단체가 중심이 되어 WCD 한국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5월 24일의 임진각 일대 걷기와 5월 25일의 서울 시청 다목적 홀에서의 국제여성평화심포를 주관하였다.

WCD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결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여성은 같은 목적으로 걸을 것이다.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둘째, 이산가족 재결합

셋째,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넷째, 비인도적 제재조치 철회

다섯째,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시폭력 금지,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의 바로 세우기

여섯째, 군비 경쟁비를 시민복지와 환경보호에 사용

일곱째,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쉽 확대(UNSCR 1325)

여덟째,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세계인들의 지지 촉구

2015 WCD 행사는 북측에서 평양과 개성에서 평화걷기, 평양 국제 심포를 통해, 그리고 남측에서도 임진각 일대 걷기, 서울 국제여성평화심포를 통해 ‘여성들이 왜 걷는가?’를 몸으로 직접 보여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다. 즉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걸림돌인 분단체제 유지 옹호자들이 그 한 가지인데, 이들은 행사 추진과정에서 맞닥뜨린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사, 주한미대사관, 국회의원, 유엔, 비정부기관들에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역시 두드러지게 남남갈등의 양상을 보였는데, WCD 주최자를 향한 ‘좌익,’ ‘중북,’ ‘빨갱이’ 딱지 붙이기는 분단 콤플렉스와 분단 프레임에 갇힌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 안의 파시즘과 분단주의, 차별과 배제에 익숙한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WCD 행사에 염수정 추기경의 격려 서한 등 각 계 평화 남성들의 지지와 성원이 답지했으며, 행사 이후 총 3회의 사진전 개최, 국제대표단의 남북여성과 해외여성의 직접적 만남 주선 등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비록 2016년 1월 6일

의 북측 핵실험으로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국제대표단은 2016년 2월의 Bali 회의와 3월의 UN CSW NGO sympo에 남북여성대표를 직접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국제대표단의 활약으로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위한 미 하원 결의안(HR384)이 통과된 바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AFS 등과 함께 Korea Peace Network 이 구성되어, '평화협정(Peace Treaty) 2020' 계획수립 등 전 세계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진행 중이다.

5. 맺음 말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여성들이 2016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예정이다.

첫째,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여성평화걷기. 2015 WCD에 이어 올해도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임진각 일대 평화 걷기와 여성평화심포를 개최한다.

둘째,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전략을 개발하고 점점 찾기를 시도한다(북측의 '김치 페스티벌' 제안과 남측의 'DMZ 평화 생태 마을 만들기' 제안 등).

셋째, 통일 이후의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자립과 자율성 확보 방안/정책을 구체화한다.

넷째, 여성을 평화협상의 테이블로(UNSCR 1325 실행 구체화하기).

다섯째, 평화협정 2020 계획을 한반도에 구체화한다.*****